

민주노동당은 어디로 6~7면
- 사회연대전략 비판
- 일심회 마녀사냥 대응 유감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12면



연말 특집 —
2006년을 돌아보며 4~5면

집값 폭등과 자본주의 9면
- 엥겔스의 《주택 문제》
존 몰라뉴 칼럼 8면
- 소외란 무엇인가?

25호 2006년 12월 23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연말 특집
증면호

파병 재연장

한미FTA 추진

노동법 · 사립학교법 개악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

2006년은 주류 정치인들이 막나갔던 해

〈맞불〉 온라인 기사 <http://www.counterfire.or.kr>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 보고 / 사회연대전략과 국민연금 개악 / '전진' 구형구 동지에 대한 재반박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노무현 정부도 잘한 것이 있다. 노 대통령이 그 어려운 와중에 이라크 파병을 단행한 … 것은 용기 있는 업적이다.”
-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노무현은 철저히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한 사이비 개혁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 보수 우익이 보낸 트로이 목마”
- 전 열우당 의원 김성호

“지금은 ‘함께 고생한 동지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무조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때가 아니다. … 내부 성찰과 반성도 없이 공안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여봐야 공허하다.”
- 일심회 마녀사냥에 굴복하라는 〈한겨레〉

“불행히도 민주노동당은 서구처럼 사민당과 공산당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 주사파 같은 공산주의자들뿐 아니라 다함께나 그 비스무리한 공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해야죠. 현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축출할 것 같으니 더욱 걱정입니다.”
- ‘자율과 연대’ 운영위원 선거에 출마한 현미녹차

비리 재벌총수들에게 성탄 특사는 부당하다

노무현과 열우당이 비리 재벌 총수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 전 진로그룹 회장 장진호, 전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대상그룹 명예회장 임창욱 등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 59명을 사면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기업 공금 수천억 원을 횡령해서 정치권에 뇌물로 바치고 엄청난 이권을 챙긴 일급 ‘파렴치범’들이다.

노무현은 집권 4년여 동안 6차례 특별사면으로 비리 정치인, 기업주들을 풀어줘 대중의 혈압을 끌어올렸다.

열우당 비대위원장 김근태는 이미 8·15 사면 때부터 비리 재벌 사면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기업주들은 그 동안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 술한 ‘선물’을 받아 왔다. 반면, 생존권을 요구하며 곡식을 불태운 농민, 복직을 요구하며 수십 미터 높이 고공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감옥에 갇혀 몇 년씩 실형을 살아야 했다.

그칠 줄 모르는 노무현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지난 4년 간 구속된 노동자 수는 김대중 정권 5년보다 훨씬 많은 9백6명(12월 18일 현재)으로 늘어났다. 아직 88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차가운 감방 안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한편, 법원은 팽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시위에 참가한 기아차 조합원 2명을 6개월 만에 다시 소환

해서 구속하더니 터무니없게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항의해 한국노총 점거 농성을 한 해고 노동자 8명에게도 1년~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특히 4명은 법정 구속까지 했다.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은 불법 정치자금에 없으면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없기에 한나라당으로 쏠려 있는 재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성탄절 특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썩은 정치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기만적인 성탄절 비리 사면은 절대 안 된다. 비리 재벌 총수들이 아니라 구속노동자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라!

유청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한다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때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대 없다”던 정부가 국민연금 개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기여율 인상(보수월액의 8.5퍼센트 ⇒ 12~20퍼센트까지 주장), 급여율 삭감(20년 재직자 보수월액의 50퍼센트 ⇒ 30~40퍼센트로 삭감), 급여산정기간 변경(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근무기간 평균),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현행 단계적 60세 ⇒ 65세)이라는 개악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개악안대로라면 20년 재직한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액은 1백9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삭감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고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의 주범은 바로 정부다.

하향 평준화

IMF 경제 위기 때 10만여 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며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을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하고 1998년에는 주식 투자로 4천1백70억 원을 날렸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60조 원이 회수불능 상태이고, 호화 골프장·주택 건설 등으로 연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당사자가 바로 정부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가족 생활을 하기에다 빠듯한 1백여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될 뿐이다. 한 달에 1천4백여만 원의 연금과 예우 급여를 받게 될 노무현이 비정규직 및 빈곤층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형평성을 말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국민연금을 핑계로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 하려는 시도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

최근 공무원노조는 전교조·교수노조·공공연맹과 함께 공무원·사학연금 공대위를 발족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공무원 연금 개악은 사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공적연금을 시장화해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선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신미정

미국 간첩 백성학 사건

이게 진짜 ‘간첩’이다

[편집자 주: 공안당국은 이번 ‘일심회’ 사건 연루자들을 간첩으로 몰아 박해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 내 일부 좌파들도 마녀사냥에 침묵하거나 동조한다. 그러나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 미국 간첩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의 위선을 잘 보여 준다.]

얼마 전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권을 둘러싸고 영인모자 회장 백성학과 CBS측 신현덕이 이전투구를 벌인 덕분에 지배자들의 은밀한 비밀이 드러났다. 지난 10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신현덕은 백성학을 미국의 간첩이라고 폭로했다. 그 뒤 폭로된 정황들을 보면 신현덕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백성학이 선을 댄 미국 측 인물은 전 CIA 요원인 미 국방부 부차관 리처드 롤리스였다. 롤리스는 그 동안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상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신현덕의 폭로를 보면 백성학의 보고는 롤리스를 통해 딕 체니에게 즉각 전달되는 것으

로 돼 있다.

백성학은 단순 ‘간첩질’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전통적 친미·수구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적극 ‘도움’을 주려 했다. 즉, 이 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전쟁광 네오콘과 결탁해 미국 제국주의를 이롭게 한 사악한, 또 진정한 간첩이다.

백성학은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9월을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것”이고, 미국은 “그간 북핵에 대한 미온적 입장 유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책임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핵·마약·위폐 관련 대북제재, 전시작전권 환수” 등으로 의제를 한정해야 하고, 노무현을 “다독거리거나 격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는 “경제·정치가 불안정한 한국의 신인도”를 낮게 평가하라고도 했다.

백성학은 “여권 대선후보는 고건·정동영·김근태 등이 차례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박근혜·이명박·손학규

등의 ‘약점’도 보고했다.

백성학은 주류 정치권의 광범한 인사들과 접촉해 이런 정보들을 모았다. 여기에는 유엔 총장이 된 반기문도 포함됐다. 여권의 한 인사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 아니”며 “국내에서 공공연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불공평하게도 현행법상 미국 간첩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간첩 사건’은 지배자들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운동 진영의 일부 인사를 ‘간첩’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이 완전한 위선임을 보여 준다. ‘조종동’은 이런 종류의 간첩 사건에는 침묵한다. 사실, 자신들이 바로 ‘미국 간첩’의 적극적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제국주의를 위해 지배자들 사이에서 암약한 미제 간첩 백성학은 처벌받지 않지만, 운동의 일부가 북한과 교류한 것은 마녀사냥의 구실이 된다.

‘일심회’ 관련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한규한

자이툰 파병 재연장과 레바논 파병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난 12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안이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12일 국방위 회의는 “자이툰 파병을 1년 연장하되 ‘2007년 임무 종결’을 못박겠다”던 열우당 의원들의 공언이 결국 파병 연장을 노린 사기극이었을 뿐임을 잘 보여 주었다.

국내외의 반전 정서와 파병 연장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파병 연장안에 “2007년 중에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끼워 넣었다.

그러나 이 모호한 문구가 결코 ‘2007년 중 철군’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2007년 중에 임무 종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2007년 중에는 철군하지 않겠다’는 애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런 수법을 써 먹었다.

또, 설사 내년 중에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고 한들 그 계획에 정말 철군이 명시될지, 또 구체적인 철군 시한이 언제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실제로 국방부 장관 김장수는 국방위 회의 내내 ‘철군’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방위 소속 주류 정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 뻔한 수작을 ‘이심전심’으로 환영했다. 특히 열우당 의원들은 ‘자이툰 부대 2007년 임무 종결’이라는 ‘면피용’ 당론조차 내팽개친 채 정부 안에 손을 들어 주는 데 급급했다. “정부안이 [열우당의] 수정안과 같은 것 아닙니까? 정부 원안대로 처리합시다.”(열우당 소속인 국방위원장 김성곤)

12월 16일 반전 집회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업 진출’과 ‘지역 재건’의 확대·강화를 빌미로 “정부가 자

이툰 철군은커녕 장기 주둔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흘 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레바논 파병안이 통과했다. 자이툰 파병 연장안과 ‘세트’로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워 국방위가 아닌 통외통위에서 처리한 것이다.

정부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운 듯 레바논 파병 계획을 제출하며 레바논 남부가 안전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다.

베트남

그러나 레바논 남부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레바논인들의 저항으로 언제든지 충돌이 재연될 수 있는, 여전히 긴장이 감도는 지역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은 15일 통외통위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978년부터 파병된 유엔군 중 2백58명이 사망하지 않았느냐며 위험성을 따져 묻자 사망자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파병안이 의결되자마자 유엔군 2백58명이 사망했다고 바로 말을 바꿨다.

또, 만일 이스라엘의 공격 때

문에 난민들이 몰려들어 보호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 임무가 아니다”, “유엔군 본부는 3중 4중의 방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서 난민들을 보호지도 않는 게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 보고를 보더라도 지난 8월 이후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라 레바논에 파병된 유엔군을 상대로 유탄 공격 등

적어도 10건 이상의 적대 행위가 있었다. 지난 여름 전쟁 동안에는 레바논 남부 주둔 유엔군 4명이 이스라엘 전투기의 폭격으로 사망한 일도 있었다.

또, 시니오라 총리의 친서방 정부에 맞선 운동 — 헤즈볼라가 주도하고 있다 — 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레바논 정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유엔군을 더 커다란 긴장과 위협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를

보면, 그 동안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병사들 중 무려 8천여 명이 탈영했다. 식민지 대중(이라크인들)의 저항, 미국 국내외의 반전 여론 고조, 미군 사병들의 사기 저하 등 베트남 전쟁을 미국의 패배로 이끌었던 요인들이 —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 이라크 전쟁에서도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것은 미국 내 정치 위기가 본격화한 1968년부터 4년이 더 지나서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전선을 확대해 수많은 사람들을 더 학살했다.

도박

부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라크가 수렁이라는 것을 알지만 거기서 스스로 나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포기한 채 물러나기에는 이라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부시는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를 2~3만 명쯤 늘리려 하고 있다. 판돈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부시가 내놓으려 하는 카드 — ‘최후의 대공세’ — 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이 이번 파병 연장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다 해도 그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 십중팔구 더 악화될 것이다 — 따라서 부시와 노무현의 위기도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 반전 운동의 중요성도 여전하다. 특히 내년 초 부시의 ‘대공세’가 시작된다면 반전 운동은 그에 맞서 즉각 행동할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

김광일

12월 16일 파병 반대 집회 참가자들 - 이들 뒤에는 90퍼센트의 반전 여론이 있다

12일 국방위에서 나온 말, 말, 말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정부안은] 그 때 가서 사정 변경이 생기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다’ 행임무 종결 계획 수립을 넣은 것은 일종의 물타기, 철군에 관한 비난 여론을 없애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구차하게 하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해 놓지 말고, ‘다’ 향을 빼[도] ...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건(열우당): 구구절절이 김학송 의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곤 국방위원장(열우당): 수정안 철회하고 정부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안대로 저희가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간을 축하하며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매주 <맛볼>을 접하며 전쟁과 신자유주의 등 기득권 보수세력의 준동에 맞선 확실하고 회피하지 않는 진보적 주장들에 좋은 자극을 얻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성애자 차별과 억압에 맞선 투쟁에 ‘다함께’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는 매우 중요했으며 앞으로 그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대, 학교, 직장에서 동성애자들은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 차별과 억압의 사슬을 끊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행동은 평등하고 진보적인 사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분명합니다.

<맛볼>이 그 힘의 영원한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분열과 혼란만 낳을 ‘사회연대전략’

[편집자 주] 이 글은 12월 16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당내 좌파 의견그룹 ‘다함께’가 나눠준 리플렛의 주요 논설을 약간만 교정 본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최근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에서 권영길 원내대표는 ‘고소득 노동자의 소득세 인상과 미래 급여 인하를 통한 저소득 노동자 지원’을 연설했다.

당의 진보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 전략의 모색’ 보고서도 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 문성현 대표도 «이론과 실천» 인터뷰에서 “우리끼리의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그룹 ‘전진’도 이 같은 ‘사회연대전략’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당원들이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는데도 ‘사회연대전략’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당 지도자들은 직접 노조를 설득하러 돌아다니고 있고, 곧 구체적 입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대선의 주요 정책으로 내걸 것이라고 한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 빈곤층을

돕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은 근본적으로 이런 취지를 전혀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바로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가 ‘양보와 나눔’에 나서자는 대안 말이다. 이것은 ‘**부유세와 군비감축을 통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말하던 것에서 **명백한 후퇴**다. 더구나 이것은 그 지극히 못한 노무현의 ‘정규직 양보론’과 다를 바가 없다.

노무현이 이런 말을 하면 비웃어주면 됐다. 그러나 당 지도자들의 이런 주장은 우리 내부에 매우 곤혹스러운 분열과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양보와 나눔?

반면, 기성 정치인들은 이런 제안을 반기고 있다. 국회에서 현애자 의원의 제안에 총리 한 명숙은 “기본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론과 실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소속 열우당·한나라당 의원들도 “현실적인 안을 내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한다.

노동계급의 적들인 저들이 왜 환영할까? 상대적으로 고소득 노동자가 양보해서 저소득 노동

자를 지원해 주면 노동자의 연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일까? 오히려 ‘사회연대전략’이 연대는커녕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양보와 나눔’론이 저소득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상대적으로 고소득 노동자들 탓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는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나눔’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줄어든다고 느낄 것이다. 보수 언론과 지배자들은 이 틀을 비집고 온갖 이간질을 기도할 것이다. 결국, 부자·기업주들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노동자들 간의 격차가 한두 배라면 노동자와 지배자들 간의 격차는 수십, 수백 배다. 노동자들 간의 한두 배 격차는 지배자들의 몫을 빼앗아오는 단결 투쟁 속에서 아래 쪽을 끌어올려 해결해야지, 위쪽을 끌어내리는 ‘양보와 나눔’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이런 단결과 투쟁이 외면당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원망한다. 따라서 당이 정규직 노동자에게 호소할 것은 단결과 투쟁이지 ‘양보와 나눔’이 아니다.

물론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우리의 양보를] 무기로 자본과 부유층을 압박해 소득세 누진율 강화 및 법인세·자산과 세 강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지배자가 그런 것에 압박을 느낀단 말인가? IMF 경제 위기 때 ‘고통분담’을 위해 노동자들이 결혼반지까지 내놓으며 ‘금 모으기’를 할 때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게 저들이다. 당이 ‘국민연금 지원 방안’을 내놓자 기초연금을 수용할 듯 사기치다가 ‘더 내고 덜 받는’ 계약을 강행하며 뒤통수를 친 게 저들이다.

강력한 대중 운동

‘사회연대전략’은 ‘부유세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외쳤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평가의 반영인 듯하다. 이제 “일면적 요구

가 아니라 참여에 기초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 권력과 언론 등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기득권 세력에게 부유세 등의 양보를 강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최초고용계약(CPE)을 철회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가능했던 것도 1930년대 유럽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대규모 파업과 투쟁 덕분이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이 같은 대중 행동을 권설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지 후퇴가 아니다.

‘부자에게 세금을’에서 ‘우리끼리의 나눔’으로 후퇴한다면 주요 지지 기반인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은 당에 배신감을 느끼고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반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양보를 더 내놓고 주장하는 자본가 정당들과 우리당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당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다.

지금 노무현과 지배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 시점에서 노동자 당의 구실은 단결 투쟁을 선포하는 것이지, 일부 노동자의 양보를 주장해 투쟁을 기뻐지게 하는 게 아니다.

지난 5년 간 부동산 불로소득만 6백조 원이라고 한다. 노무현은 대통령을 관둔 후 매달 1천4백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이다. 노무현은 이라크 전쟁 지원에 수조 원을 썼고 앞으로 수백조 원을 들여 군비를 증강하겠다는 한다.

이런 돈들을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위해 쓰자는 주장은 여전히 옳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요구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연대전략’을 철회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 문제나 ‘일심회’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수세적인 대처 방식뿐 아니라 최근 당 지도부가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당이 낡한 사회체제에 충실하다는 점을 지배계급에게 보여 주기를 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부는 당이 계급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이나 ‘국민 정당’으로 비쳐지기를 원한다.

사실,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지방선거 뒤 ‘중소기업 육성론’ 등 몇몇 포퓰리즘(계급연합)적 정책들을 추진하려 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의원 원희룡이 내놓은 ‘근로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인상’ 안(案)을 비판하는 논평에서 그 위선적 안을 좌파 입장에서 비판하기보다는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근로소득세 감면에 반대했다.

당 지도부는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양보 “참여” 없이 복지 확충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승리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만” 하다가는 “국민경제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주류 정당으로 낙인찍힐까 봐 두려워하는 듯하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신경을 쓰려다 보니 부유세처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급진적 분배 정책에서 ‘계급 내 분배’로 후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기에 기존 체제에 순응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을 지키고 개혁

현실

‘사회연대전략’을 비롯해 당 지도부의 우경화를 반영하는 정책들은 지도부가 더는 투쟁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운동이 일시 침잠한 듯한 상황의 주된 책임은 대중 자신이 아니라 대중의 지도부들이 져야 한다. 당 지도부는 그 동안 민주노동당 상층 간부들의 투쟁 회피와 배신을 비판하기를 삼갔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그들과 일종의 공모를 한 셈이다.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전략을 통해 사용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연대전략’의 첫 사례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보면 노동자들의 양보로 마련되는 재원은 3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양보를 미끼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5년 동안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양보하면 저들도 양보할까? ‘사회연대전략’ 지지자들 중에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

하면 지배자들이 알아서 양보할 거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해 한석호 ‘전진’ 집행위원장은 “우리[노동계급]가 먼저 양보해서 그들[지배계급]의 양보를 끌어낼지 말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사실, ‘사회연대전략’이 지배계급에게 민주노동당의 체제에 대한 충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배계급의 양보를 이끌어 낸다는 점은 한석호 집행위원장 말대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략의 가치가 있기는 한 것인가?

한 위원장은 또한 ‘다함께’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시혜’가 뭐가 나쁘냐고

정면 반박했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호부조”와 “양보”의 정신에 따라 정규직이 추가로 10조 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 나머지 10조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다.

그리 되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가릴 것 없이 서로 불만과 불신만 쌓일 것이다. 또, 5년이 지난 뒤에도 보험료를 정규직이 부담할지 비정규직이 부담할지를 두고 다툴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며 좋아하고 기뻐할 자들은 정부와 기업주들이다.

비정규직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투쟁에 연대하도록 북돋는 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킬 진정한 대안이다.

민주노동당의 ‘일심회’ 대응 마녀사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12월 14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발표한 ‘일심회’ 관련 입장은 우려스럽다. 최고위원회는 “정치적 음해 공작에 대해서는 모든 당력을 모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게중심은 공식 유감 표명에 놓여 있었다.

자체 진상규명에 따른 당헌·당규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최고위원회가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에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1년 내내 당이 그토록 열의있게 건설해 온 한미FTA 반대 운동이, 그리고 90퍼센트를 넘는 지지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파병 반대 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최고위원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심상정 의원은 〈한겨레〉인터뷰에서 마녀사냥을 비판하기는커녕, 탄압받는 당원을 비난했다. 두 당원이 “당직자 신상을 〈북한에〉 유출했다는 검찰 발표가 사실이라면…인권침해이고 일탈 행위”라는 것이다. 심지어 심재옥 최고위원은 최기영 동지의 묵비권 행사까지 비판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 사민 부총장 자신이 직접 나서, 당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현직 검사도 검찰의 징계를 받아가며 권유하고 일부 변명은 공식적으로 권유하는 묵비권 행사조차 포기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12월 17일 당 지도부는 구성된 최기영 사무부총장을 면회해 ‘면직’을 통고했다. 물론 사무부총장 업무를 계속 공백 상태로 둘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항의 상징성을 위해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 지도자들이 ‘마녀사냥’당하는 동료 당원을 방어하기는커녕 등 뒤에서 돌을 던지는 듯한 언행들을 하고 그들과 ‘무관함’을 항변하더라도 공안당국은 민주노동당을 겨냥해 ‘일심회’ 사건을 부풀리고 계속 물고늘어질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와 관계 없이 저들은 ‘아님 말고’ 식 왜곡과 부풀리기를 통해 마녀사냥을 이어갈 것이다. 검찰은 누구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 만한 정보들을 ‘국가 기밀’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오죽하면 ‘내이버 간첩단’, ‘구글 간첩단’도 나오겠다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인터넷 언론 〈레디앙〉은 최기영 동지가 장민호에게 보고한 내

용에는 “핵심 당직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며 “경악스럽고 참담하다”는 반응들을 보도했다.

물론 당원의 성향이나 당의 회의 내용이 북한 당국에 유출됐다면 껄름칙한 일이다. 그러나 설사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그것은 운동 진영의 비난을 받아야 할 사항이긴 해도 국가의 탄압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 최기영 동지가 미국 CIA나 한국 국정원에 넘긴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지금 한국 검찰이 그런 내용들을 입수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강제 압수했기 때문이다.

사실, 검찰 공소장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구속 동지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왜 ‘일심회’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와 여러 차례 인터뷰하면서 당내 정보를 넘기는 “당 관계자”의 행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가?

이중잣대

켄타우르스라는 필명의 ‘자율과 연대’ 운영위원은 〈조선일보〉에 ‘타도 주사파’라는 블로그까지 만들어 당내 동향들을 올려놓기도 했다.

당원들의 자세한 신상정보가 검찰에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고발을 강행한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일심회’ 사건의 본질은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회대의 악법을 휘두르며 자행하는 공안당국과 우익의 ‘마녀사냥’이다. 저들은 사소한 사실들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북의 지령’, ‘간첩 행위’를 들먹이며 사람들의 공포를 부추기려 한다.

조중동이 부추기는 ‘여론’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분파적 경쟁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마녀사냥’을 방조해서도 안 된다. 마녀사냥에 정면으로 맞서고, 탄압받는 동지들을 방어하고, 적들의 위선과 광기를 통렬하게 고발하며 반격해야 한다.

그래미안 ‘일심회’ 관련자들이 지지하는 종류의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도 가능해진다. 최고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재고돼야 하고, 당 지도자들도 비겁한 언행을 그쳐야 한다.



존 몰리뉴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⑬

소외의 근원

이 연재 칼럼에서 지금까지 맑스의 소외론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 오히려 그것은 맑스주의 전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나중에 다룰 변증법과 마찬가지로 ‘철학적’이고 ‘난해한’ 문제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소외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직결돼 있다.

맑스의 소외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외’라는 말이 일상 어법에서 “사람들이 멀리하거나” “버림받거나” “파들림당한” 느낌을 뜻하는 것으로 굳어진 반면 맑스의 소외 개념은 일상적 의미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오래된 철학적 어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맑스의 청년기에(특히 헤겔의 저작에서) 유행한 어법인데, 이것도 맑스의 소외 개념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또한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이 주제를 다룬 많은 학술 논평들이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은 맑스의 진의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도 덧붙여야 한다.

맑스가 자신의 소외론을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은 《1844년의 경제학·철학 초고》였다. 이 책은 맑스가 기존의 철학·경제학·사회이론과 관련해서 자신의 사상을 설명한 초기 저작들 가운데 하나다.

기존의 철학 어법에서 인간의 소외는 인간이 ‘신’이나 ‘삶의 진정한 의미’ 또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성’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됐다는 뜻이었다. 헤겔에게 소외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뜻했으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신의 문제, 우리의 그릇된 의식과 불충분한 인식의 문제(이 문제를 헤겔 철학은 교정하려 했다)였다.

맑스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달랐다. 그는 소외가 단지 ‘감정’이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경제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빗 리카도의 정치경제학을 이용해서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 생산물에서 소외된다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제품을 소유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한

다. 그 제품은 노동자들과 대립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사물’의 세계를 이룬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들은 이 낯설고 적대적인 세계의 힘을 강화시킨다.

맑스는 이렇게 말한다. “노동이 부자들을 위해 경이로운 것들을 생산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궁핍을 생산해 준다. 노동은 왕궁을 생산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오두막을 생산해 준다. 노동은 아름다움을 생산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뒤틀리고 일그러진 것을 생산해 준다.”

그러나 맑스는 그 분석을 더 결정적인 단계까지 밀고 나아간다. 그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에서 소외돼 있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생산 행위, 노동 과정 자체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생산물은 어쨌든 생산 활동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노동을 소외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맑스는 노동이 노동자에게 **외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지

적한다. “그것[노동]은 그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노동할 때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다.” 그것은 자발적 노동이 아니라 강요된 노동이고, 강제가 사라지자마자 “그것은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기피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이고, “노동할 때 그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동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들에게 판매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통제

이 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노동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되고, 자신의 역사와 사회를 창조한다. 따라서 노동의 소외는 생산자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물질적 세계로부터,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신의 인간성으로부터, 그들 자신과 사회로부터, 그리고 자연으로부터도 —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맨 처음으로 자연과 관계 맺기 때문에 — 소외되고 소외해진다 뜻이다. 따라서 소외는 우리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 있다. 심지어 자본가들도 소외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

면 그들도 똑같은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똑같이 소외된 관계의 보수적 측면일 뿐이다.

따라서 소외론에는 맑스주의의 자본주의 비판 전체가 맹아적 형태로 담겨 있다. 맑스의 소외론은 왜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한 체제인지 보여 준다. 그리고 왜 자본주의가 산 노동을 죽은 노동에, 인간을 이윤에 종속시키는지 보여 준다. 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때조차 그들의 삶이 임금노동에 의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지 보여 준다. 왜 가장 친밀한 인간 관계조차 그토록 자주 상처받고 왜곡되는지 보여 준다. 왜 사람들이, 억압자들뿐 아니라 피억압자들도 서로 상대방을 그토록 야만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왜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체제인지, 심지어 자본가들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체제인지 보여 준다. 그리고 왜 자본주의에서는 생산과 과학기술이 진보할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파괴하는지 보여 준다. 핵전쟁의 위협, 나찌의 홀러코스트 대량 학살, 지구 온난화의 잠재적 재앙은 모두 소외된 노동에 바탕을 둔 세계의 극단적 사례들이다.

그리고 소외가 비록 심오한 철학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모든 노동자가 즉시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이 공장에

서, 콜센터에서, 슈퍼마켓에서, 주방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삶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든 파업, 모든 노동조합 투쟁은 임금을 둘러싼 것이든 노동시간이나 조건을 둘러싼 것이든 부분적으로 소외된 노동에 대한 반란이다.

그러나 맑스의 소외론에는 혁명적 함의도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사회복지의 향상, 모종의 의회 입법 그 어느 것도 소외를 극복할 수 없다. 의식이나 태도의 어떤 변화도 마찬가지다. 오직 생산관계의 질적 변화만이, 사회의 노동자 권력과 작업장의 노동자 통제만이 노동자들을 노동의 주인으로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소외를 끝장내고 인간성의 진정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다.

주의 사항: 맑스의 소외론은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하지만, 지면 제약 때문에 여기서 다룰 수 없었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맑스의 원전을 참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 핵심 교재는 《1844년의 경제학·철학 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외된 노동’ 부분이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읽고 나면 엄청난 보상이 따를 것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이다.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엔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최근 몇 년 간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문제의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 엔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를 읽어 볼 만하다. 1872~73년에 쓰여져 역사적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 대도시의 주택난도 매우 심각했다. 90퍼센트에 이르는 사람들이 주택이 없었고, 싼 임대료를 찾아 악취 나는 지하방에 살거나 비좁은 방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기도 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주택 문제도] 다른 모든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해결된다. 수요와 공급의 점진적인 경제적 조정을 통해, 즉 항상 되풀이해 문제 자체를 새롭게 산출하므로 전혀 해결이 아닌 해결을 통해” 해결된다.

특히, “건축업이 비싼 주택을 훨씬 더 유리한 투기 대상으로 보고 노동자들의 주택은 오직 예외적으로만 건축”한다. 이는 대형 주택 건설을 선호하는 오늘날의 건설회사들과 꼭 같다. 1997년 경제 위기로 건축 경기가 악화하자 김대중 정부는 그나마 남아 있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대폭 완화했다.

투기 대상

1870년대 당시 독일의 주택난에 대해 프루동주의자인 뮐베르그와 박애주의적 자본가 에밀 작스는 모든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택 문제’에 대

한 대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의 해결의 핵심은 노동자가 자기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발전하는 산업 생산력을 거슬러 사회를 소생산자들의 연합체로 만들려 한 프루동주의자는 기존의 임대료를 일종의 주택할부금으로 바꾸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또, ‘노동자 없는 자본가’를 꿈꾸는 박애주의적 자본가는 ‘노동자 자조’로 돈을 모아 노동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온갖 폐단들이 극복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엔겔스는 주택 문제가 자본주의의 근원적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현대 대도시 노동자들과 일부 소부르주아들의 주택난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교적 작은 이차적 폐단들 가운데 하나다. 주택난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노동자들로서 착취하는 데 따른 직접적 귀결이 결코 아니다.” (강조는 엔겔스)

게다가 프루동주의자의 요구는 북고적이었다. 당시에는 집을 가진 노동자들이 채마밭이 딸린 집에 살며 수직기 등을 이용

해 개별적 생산을 했기 때문이다. 소생산자 사회를 꿈꾸는 프루동주의자의 이런 주장은 대규모 기계제 공업을 포기하라는 주장인 셈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인 노동자 착취를 해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대안’들은 사실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엔겔스는 주장한다.

신기술 도입과 산업 격변이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길거리로 내몰고, “따라서 그야말로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집도 언제나 빌리려는 사람이 나타나며, 끝으로 가옥 소유자가 자본가로서 자기 소유의 가옥에서 최고의 집세를 무자비하게 짜낼 권리뿐 아니라 또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회가 존속하는 한 주택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주택난

오늘의 한국도 주택보급률이 1백 퍼센트를 넘었지만 쪽방이나 지하·옥탑방, 판잣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1백60만 명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 전체 3백31만 가구 중 10.7퍼센트인 35만 5천 가구가 지하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대안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지만, 엔겔스는 당시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의 예를 들면서 국가 개입을 기다리는 것도 무망하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모든 **자유주의** 정부의 원칙은 오직 극도의 필요성에 못 이겨서만 사회적 개혁 법안을 제출하며 이미 존재하는 법령

들도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 ... 최상의 경우에도 국가는 관례로 된 표면적 미봉책이 어디서나 균일하게 실행되도록 배려할 뿐이다.” (강조는 엔겔스)

엔겔스가 비판한 자유주의자들은 집값이 폭등한 지난 몇 년간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대선이 가까워져야 표를 얻기 위해 대책을 내놓는 한나라당이나 열우당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또, 한나라당 홍준표의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열우당 이계안의 ‘환매조건부 주택’도 모두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는 열우당 법안을 비판하며 “법안 13조에서는 아파트 구입 10년 후엔 공공에 팔지 않아도 되게 해놓아서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준표의 방안도 10년 후에는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열우당 이계안은 “당장 집값을 내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자신의 방안의 한계를 실토했다.

게다가 열우당이 추진하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 개발, 분양 원가 공개 등의 대책들도 당정책의 과정에서 변질되고 있다.

물론 노동자의 대중 행동으로 국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다. 독일과 영국,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제1차세계대전 종전시 일어난 혁명이나 준(準)혁명 후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국가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시작했고, 1950~60년대 호황기에는 주택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전반적인 복지 감축 흐름 속에서 이런 성취들도 공격받고 있다. 1980년 당시 공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2퍼센트에 이르렀던 영국은 2000년에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22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오늘날 공공 소유에 기초한 스웨덴의 주거정책 역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공공 주거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따라서 엔겔스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복잡하다. “주택난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오직 하나의 수단이 있을 뿐이다. 지배계급에 의한 노동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 대도시에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현실의 ‘주택난’을 모두 즉각 시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주택용 건물이 있다. 그런 일은 물론 오늘날의 소유자들로부터의 몰수를 통해서만, 즉 숙소가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까지의 주택에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노동자들을 그들의 가옥에 수용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공의 복지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조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 권력을 전취하자마자, 마치 오늘날의 국가에 의한 다른 몰수와 수용이 그렇듯이 쉽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는 엔겔스)

강동훈

《주택 문제에 대하여》는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엔겔스 저작선집 4》(박종철출판사)에 실려 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아군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력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노조가 가야 할 길

2003년에 승리한 서울대병원 노조 — 투쟁적 활동가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이런 자주적 행동권을 옹호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조합원 3만 명의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이 공식 출범했다.

12월 26일에는 약 5만 명의 조합원을 아우른 운수노조도 출범 예정이다. 공공·운수 분야의 산별노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운동의 진전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공동 투쟁의 경험 한 번 제대로 축적해내지 못하고 … 교섭권과 쟁의권 집중부터 해보자는 노조 통합이 가당한가”(사회보험노조 ‘현장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공노조 창립 대회 때 진행된 논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권’을 둘러싼 것이었다. 쟁의행위에 관한 규약 79조가 논란이 됐다.

79조 3항은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으로

로 갈음할 수 있되, 사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규약은 현장 파업을 가로막는 이중의 잠금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긴급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즉시 행동에 돌입할 경우 이에 대해 위원장이 심사해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위원장이 파업을 승인하더라도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만약 위원장이나 중앙집행위원회가 파업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 파업은 즉시 불법 파업으로 규정돼 정권과 자본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갑작스런 해고 통지 등으로 즉각 행동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이 규약은 결국 공공노조의 상층 간부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비슷한 규약이 금속노조에서

도 제출됐지만 다수 대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노조 창립대회에서는 이 규약반대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원안이 통과됐다.

서울대병원 김진경 분회장이 반대 발언을 했다. 2004년에 서울대병원 분회는 바로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가로막는 산별 지도부에 반발해 보건 의료노조를 탈퇴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공공노조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운수노조가 창립되고, 많은 노동조합들이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 공공노조의 투쟁적 활동가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권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건설해서 규약 등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구체적 쟁의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행동도 조직해야 한다.

정중남

Forums

동부

한미동맹은 균열되는가?

—오늘날의 세계 패권 질서와 한국의 대응

1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연사: 김하영(《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건대역 5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맞붙〉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일 25일에 인출됩니다.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TV리뷰

〈러시아 혁명〉

스탈린주의의 본질

현대차노조 파업 투쟁과 납품 비리 파문

〈MBC 다큐〉 5부는 스탈린 치하에서 일어난 끔찍한 억압의 사례들 — 까레이스끼 [고려인]를 비롯한 소수민족 강제 이주 정책 · ‘제5열’[내부 스파이] 공포를 이용한 고참 불세비키와 해외 혁명가들 탄압 등 — 을 아주 생생하게 잘 다뤘다.

〈MBC 다큐〉는 ‘왜 스탈린은 대공포(대숙청)가 필요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스탈린의 “편집증에 가까운 의심”과 당시 러시아의 안보 위기 상황을 이유로 제시했다. 물론 둘 다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스탈린 공포 정치의 근본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스탈린주의는 러시아혁명과 레닌주의의 자연스런 연장선이 아니었다. 스탈린은 내전 이후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레닌과 트로츠키가 지켰던 세계 혁명의 이상을 저버렸다. 스탈린은 외부 압력에 맞서 살아남으려면 제국주의 국가들과 동일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탈린 정부의 외무장관이었던 막심 리트비노프는 “소련의 방어 능력은 더는 국제적 단결이 아니라 육 · 해 · 공군력의 가차없는 증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런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는 급속한 공업화가 필요했다. 〈MBC 다큐〉가 인용한 스탈린의 유명한 지상명령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소련은 선진국보다 50~1백 년이나 뒤져 있다. 그 간격을 10년 안에 좁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소련을 짓밟을 것이다.”

1960~70년대 남한도 경험했듯이, 이런 무자비한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재와 지도자 숭배가 어느 정도 필요한 법이다. 〈MBC 다큐〉가 잘 보여줬듯이, 이를 위해 스탈린은 1917년 혁명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모두 숙청해야 했다. 스탈린주의와 불세비즘 사이에는 피의 강물이 흘렀던 것이다. 스탈린 치하의 극심한 억압은 후진국들의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근본으로 다르지 않았다.

〈MBC 다큐〉 5부는 러시아 혁명이 세계에 미친 영향도 다뤘다. 첫째, “소련 공산주의는 히틀러와 독일 나찌즘의 탄생을 기여했다.” 둘째, 식민지 해방 운동에 영향을 미

쳤다. 셋째, 냉전기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한국전쟁, 쿠바혁명과 베트남전쟁 등에 영향을 미쳤다.

히틀러

그러나 〈MBC 다큐〉는 각 내용을 간단히 지나치듯 다룬 데다 부적절한 설명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첫 번째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다뤄볼까 한다.

〈MBC 다큐〉는 리처드 파이프스 같은 냉전주의 우익의 권위에 기대 이런 주장을 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의 유산이 남아 있던 1920년대 초 · 중반에 독일에서 히틀러의 영향력은 보잘것없었다. 1923년 11월 히틀러의 ‘비어홀’ 폭동(뮌헨 폭동)은 웃음거리였을 뿐이다.

나찌가 득세할 수 있는 사회 상황을 조성한 것은 자본주의의 엄청난 위기와 독일 혁명의 패배였지, 러시아 혁명이 아니었다.

굴락(강제 노동 수용소)에 입소하는 사람들 — 무자비한 공업화를 위해 독재가 필요했다 오히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1918~23년 독일 혁명을 고무했다.

나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대공황 이후였다. 이 때 소련에서는 강제 공업화와 강제 농업 집산화 등 스탈린 반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스탈린주의는 나찌의 정권 장악에 부분적 책임이 있다. 스탈린이 장악한 코민테른의 방침 때문에 독일에서 나찌에 맞서는 사민당과 공산당의 공동전선이 건설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반혁명의 한 결과이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산물은 아니었다. 스탈린주의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그것의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MBC 다큐〉가 보여준 사실들을 한 줄로 꿰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할 것이다.

■ 토니 클리프의 《소련 국가자본주의》, 마르셀 리브만의 《레닌주의 연구》를 참고하시오. 김용욱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간부 한 명이 구속되면서 현대차 박유기 집행부가 사퇴하게 됐다. 진상이 더 밝혀져야겠지만 이것은 현대차 조합원들과 전국의 노동자들을 실망시킨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조중동과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룬스타, 바다 이야기, 제이유 로비 사건 등 온갖 비리의 몸통이 바로 이들 아닌가.

사실 몇 개월째 끌어오다가 지금 관련자를 구속한 것도 민주노총 파업을 겨냥한 것이 명백하다. 일부의 노조 간부의 일탈을 빌미로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미 8월 중순에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기념품 관련 의혹을 밝힐 것을 한 동지와 함께 대자보로 공개 제기한 바 있다. 그 때 박유기 지도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진상을 밝혔다면 지금의 난국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유기 지도부의 회피가 결국 현장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조선일보〉는 현대차노조가 민주노총 파업에 ‘개근’했다고 비난했지만, 박유기 지도부도 2~4시간 부분 파업만을 호소해 왔다. 조합원들은 이런 지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려는 지도부의 진정성을 크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각 현장조직들도 박유기 지도부 사퇴에만 열중했지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이 취소되는 것은 신경쓰지 않았다.

노동법 개악에 맞선 현장 투쟁 건설보다는 노조 지도권 다툼에 더 열중한 것이다.

이번 배임 사건이 기업별 노조 때문이고 산별노조가 해결책이라는 말이 있지만, 노조 상근 간부의 일탈은 산별노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장조합원들이 노조 상근 간부들을 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활동가)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대화하자더니 뒤통수친 대학 당국

최근 고대 당국은 9개월째 천막 농성 중인 출교 학생 7명과 이들을 적극 지지해 준 학생 13명을 상대로 천막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학교 당국은 “학생 신분도 아닌” 이들이 “불법적으로 천막을 치고 있어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렸다.

학교 당국은 이미 두 차례나 천막에 철거 계고장을 보냈지만, 그 때마다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학교 당국은 방학이 시작돼 학생들 다수가 학교에 없는 틈을 타서 야비하게 학생들을 제소했다. 이제

는 공권력까지 동원해서라도 천막을 철거 하겠다는 것이다.

야비한

이필상 신임 총장은 총장 선거 전후에 “대화를 통해 출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정작 고대 당국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대화는커녕, 학생들이 어윤대 총장에게 대화를 요구한 것을 두고 “쫓아가 폭행을 하려” 했다고 하는 등 여전히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제자들을 학교에서 영원히 추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추운 겨울날 천막에서마저 몰아내려 하는 것이 고려대 당국이 얘기하는 “스승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전통”인가?

어윤대 총장은 낙선했지만, ‘어윤대 총장 없는 어윤대주의’는 여전히 고려대에 남아 있다. 재단과 당국은 출교자들이 대학에 남아 항의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탄압함으로써 신자유주의 대학 운영의 걸림돌인 학생 운동을 뿌리뽑으려 한다. 천막 안으로 파고드는 칼바람 속에서도 출교자들은 투쟁의 맞불을 지피며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서범진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최근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이병석은 “전효숙 지명 철회와 비정규직법 통과가 이뤄진 뒤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자는 합의가 이미 이뤄진 바 있다”고 실토했다.

추악한 뒷거래는 끝나지 않았다. 새해 예산안과 파병 재연장, 노사관계로드맵을 연내 처리하되 사학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이면 합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저들은 노동법 개악을 위한 더러운 수작도 부렸다. 노사관계로 드맵을 일부 손질한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협박한 것이다.

수정안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업종을 4개에서 2개로,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에서 절반 허용으로 조정한 내용이다. 저들도 로드맵의 일방적 강행 처리가 부담스러웠기에 이런 수정안을 내놓은 듯하다.

그러나 이런 술수에 대한 우리편 지도자들의 대응은 한심하기만 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수정안을 즉각 거부하지 않고, 민주노총 지도부로 공을 넘겼다.

민주노총 조준호 지도부는 수정안을 몇 차례나 산별대표자회의에 제시하며 은근히 수용을 종용했다. 투쟁 김빠기를 자초한 것이다. 결국 수정안은 거부됐지만, 어이없게도 “민주노동당의 유연한 원내 전술을 보장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졌다. 사실, 비정규직 개악안 통과 다음 날, 심상정·최순영 의원 등이 노동부 장관 이상수와 함께 패션쇼 모델로 나선 것부터 부적절했다. 이런 진정성 없는 태도 때문에 의원단 ‘소환’ 요구까지 터져나왔다.

그런데 이어서 의원단은 조금 수정됐을 뿐 본질적으로 개악이 명백한 로드맵의 상임위 통과를 방조해 버렸다! <매일노동뉴스>와 <민중의 소리> 보도를 보면, 단병

호 의원은 수정안의 통과를 막지 않는 대신 반대 표만 던진다고 합의한 듯하다.

현장조합원

물론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한노위를 점거하고 저지했더라도 저들은 경호권을 발동해 날치기를 강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악의 성격을 더 뚜렷이 드러내고 노동자들의 투지를 더 촉발했을 것이다.

당 지도자들(특히 권영길 의원과 문성현 대표)이 작업장을 돌며 투쟁을 호소하기는커녕 정규직 양보의 ‘사회연대전략’을 설득하러 다닌 것도 어처구니없다.

그럼에도 지난 한 달 간 간간이 이어진 8일 간의 하루·부분 파업에 평균 8만 명, 연인원 71만 명의 노동자들이 1인당 평균 25만 원의 임금 손실을 무릅쓰고 참가했다. 지도자들이 김빠기를 하고 생색내기 지침만 내리는데도 노동자들의 파업 참가 열의가 이

정도였다면 결코 실망할 일만은 아니다.

비정규직 개악안 통과 후, 철도 공사는 벌써 새마을호 승무원 등 3백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현장조합원들이 참가하는 투쟁만이 노동법 개악 저지와 무력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전지윤

외국인수용소 난민 신청자들의 처절한 투쟁

화성 외국인수용소에 구금된 이란·파키스탄·나이지리아 난민 신청자 15명이 지난 12월 13일부터 5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다. 이들이 단식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수용소 측은 12명을 청주와 여수 수용소로 강제 이송해 버렸다. 이들 중 한 이란인은 수용소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였다. 그 이란인은 “형편없는 식사 때문에 항의하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가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하소연 했다.

이들은 강제 이송에 항의하며 여수와 청주 수용소에서도 단식을 했다.

이들이 단식 투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난 11월 난민 신청을 거부당한 파키스탄인 두 명이 본국으로 송환됐고, 이 때문에 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을 ‘가짜 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살다가 단속에 걸려 수용소에 구금되자 난민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난민 신청자가 4백50명으로 급증하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체류 자격을 얻고자 난민 신청을 악용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난민법에도 한국 체류중에 난민 사유가 발생하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래로 신청자 1천8명(2006년 10월 현재까지)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50명뿐이다. 그런데도 ‘가짜 난민’ 운운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2001년 UN조차 한국 정부의 난

민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 난민 신청자들은 외출 금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에 고작 20분 정도 좁은 운동장을 거닐 수 있다. 그런데 난민 심사 기간이 적어도 1년씩 걸리다 보니 심지어 1년 이상을 갇혀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 난민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더 어렵다. 한 파키스탄인은 난민 신청이 거부돼 행정 소송을 준비하다 변호사가 무책임하게 방기해 제소가능 기간(90일 이

내) 제한을 넘겨 버려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것이 낮선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법률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통역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또는 박해받을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두 혼자서 입증해야 하니 그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비록 단식은 끝났지만, 난민 신청자들은 이 사실이 본국까지 알려졌을 때 생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처지를 외부에 알리려고 아직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이정원